

# 토론 및 질의·응답

## 제2분과 「經營經濟와 情報通信產業」

사회 : 발표를 해주신 세분의 중앙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에 계신 안문석교수와 쌍용컴퓨터 박병철사장을 모셨습니다. 먼저 안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문석교수 :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시고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발표자의 입장이 뚜렷한 걸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화사회가 되면 장미빛의 밝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것처럼 소설 쓰듯 얘기하고 있는데 김영봉교수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는 점에서 좋은 접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영봉교수가 접근하고 계시는 네가지 측면의 영향, 예를들면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영향, 분배구조에서의 영향, 고용측면에서의 영향,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의 영향에 대해 물론 본인은 추리다·추론이다라고 하시지만 상당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걸 느낍니다. 그단정의 이면에는 잠재적 가정이 상당히 많음을 느끼고, 그 잠재의 가정이 현실에 타당한지 부각시키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토론의 앞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사회라는 것이 본질

적으로 선진국은 선진국으로 후진국은 후진국으로라는 구조를 계속 밀고 나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선진국은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후진국이다라는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관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접근 가능한가? 한학장이 지적한 것처럼 유명한 거실클론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후발국은 후발국이 갖는 대단히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경제성장면에서 후발국이 갖는 장점은 선진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한학장이 여러번 말했던대로 정부가 하나로 인코퍼레이트 되어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읍니다.

거실클론의 경우 구라파를 중심으로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선진국을 따라 잡기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후발국이 어떻게 노력해서 선진국이 되는가, 또 그후 일본이라는 후진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느냐 하는 여러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서 보더라도 선진국은 선진국, 후진국은 후진국이라는 식의 공식보다는 플렉시블하게 후진국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으나 하는 긍정적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본



1	2	3
4	5	6

- ① 김세원원장 (사회자)
- ② 김영봉교수 (주제발표자)
- ③ 김길조교수 (주제발표자)
- ④ 한영환학장 (주제발표자)
- ⑤ 안문석교수 (토론자)
- ⑥ 박병철사장 (토론자)

가정뒤에 숨어있는 잠재가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께서 에벌루션(evolution)이 아니고 레벌루션(revolution)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벌루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때 오히려 후발국인 우리가 잘하면 앞설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 고용면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물론 실업사태가 일어날 수 있읍니다. 거기서도 자동화를 완전자동화로 가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읍니다. 자동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실업사태가 납니다. 컴퓨터 입력장치에서 자동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가 완전히 자동화 되었다면 다시말해 우리가 쓰는 글씨, 사람이 하는 말을 읽을 정도로 자동화 된다면 실업사태가 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컴퓨터는 눈도 귀도 없는 바보라는 사실입니다. 천상 사람의 눈이나 귀에 의한 즉 키엔트리요원에 의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읍니다. 기계가 불완전성을 가질 때 오히려 고용창출효과를 가질 수 있읍니다. 그 불완전에 대한 대단히 많은 메인티너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동차가 등장할 때 지게군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반면에 자동차정비서비스 업소가 동네마다 생길 거라고 예견하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보산업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거마비 받는 것도 고용창출효과입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번째 분배문제에 대한 기본가정이 되겠습니다. 분배문제에 관해서는 발표자께서는 분배의 기본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다시말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계층과 못가진 계층 또는 가진 국가와 못가진 국가 그것은 영원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이 들어가면 더욱 그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가정과 함께 정보화가 분배문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입장장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립적인 것이 아니냐, 중립적이란 말은 사회의 분배구조가 컴퓨터나 정보화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현재의 분배구조도 대단히 나쁘고 또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회는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분배구조가 나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번째,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가 갖는 관준민비적인 형태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획일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사회가 될것인가, 발표자는 정보화사회가 이루어지면 획일주의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학장이 인용한 앤빈 토플러 같은 석학처럼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다양성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어느 일방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정보화사회가 갖는 일반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발표자가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일방적인 가정만 강조한 나머지 그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반대 방향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해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사회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독립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 김길조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코멘트하겠읍니다. 김교수는 S/W산업에 대한 자료를 대단히 많이 수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제목을 일종의 경영전략이다라고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S/W산업의 경영실태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표자 논문의 3페이지 S/W산업의 구성요소에 S/W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이 빠져 있어 유감입니다. 사람, S/W개발도구, 기기만 가지고 S/W가 만들어 지느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의 실제가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식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략적인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S/W를 어디서 만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식을 산출하는데서 만들게 되고 S/W는 어떤 면에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산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산물을 잘 가공하여 경제성이 높게 되는 S/W가 갖는 측면을 강조하셨다면 전략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S/W를 중간투입재인가 최종생산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두가지면은 다 있으나 대부분 발표자가 최종생산재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김교수께서는 잠재적 가정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가정이냐 하면 미국식, 일본식, 한국식 S/W전략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미국식 전략이고 두번째가 일본식, 가장 나쁜것이 한국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 대단히 명쾌히 결론을 내리고 계신데 과연 그 전제조건이 맞는가 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반드시 패키지화 시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전략인가. 일본의 경우 패키지화 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 주

고 유지·보수해 주는 그런 식을 채택했겠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우리의 여건과 관련지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것인가의 심층분석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발표하신 한학장께서는 워낙 명쾌하게 말씀하셔서 별로 할 게 없으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맨끝 부분에 체신부를 중심으로 정보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종을 울리시고 앞서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중화학공업을 정부주도로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낭비가 있었읍니다. 그같은 시행착오는 5공화국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정보산업분야에서 5공화국기간에 그 중화학공업과 비슷한 정부주도 산업정책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분야는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정보나 자료가 있다면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음은 쌍용컴퓨터 박병철사장께 부탁드립니다.

**박병철사장 :** 저는 여기에서 세상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길로 들어선지 5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세미나한다고 하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 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경제학·행정학·법학·사회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정보산업을 이해하는 걸로 봐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껴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세분의 발표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첫째 김영봉교수의 말씀중에는 현재 선진국간의 격차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생산성이 앞서 있고 R&D에 있어서도 투자규모가 다르므로 점점 기술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김교수가 말씀은 안하셨지만 다행히도 S/W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S/W산업은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는 S/W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의 백로그(back log)가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고, S/W를 자동화한다고 하지만 고학력의 고급인력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단계에 불과한데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문화의존성이 많으므로 이런 세가지 차원에서 S/W산업을 잘 육성하면 오히려 김영봉교수가 염려하는 격차의 벌어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 있는 사람도 이 강의를 듣고 S/W산업을 키우면 선·후진국간의 차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S/W산업이 어떻게 끌 수 있느냐, 정부면 정부, 사회면 사회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두번째는 우리 스스로 커야 하고, 세번째는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S/W산업과 관련해

서 김영봉교수에 대한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둘째 김길조교수는 문제점을 상당히 상세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 페이퍼를 읽는 S/W업체 사장이나 누구든지 전략은 너 스스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쉽다면 교수분들이 이 기회에 정부나 우리가 S/W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어느 세미나에서나 정보산업중 S/W산업이 아주 중요하므로 전략 산업화 해야 한다고 좋은 부분에서 언급은 하고 있으나 S/W산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정부와 S/W업체 사장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교수 논문을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업계측 입장에서는 교수나 언론을 중심으로 로비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또하나 김교수가 발표한 내용중 끝 부분에 유교문화가 정보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치 않는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60~70년대에 기술도입하면 S/W, 노하우,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이 들어 있는데 돈은 지급해 놓고 프라이스 리스트에는 들어있지 않아 그저 거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의 가치인정에 S/W업체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들의 성장도를 그려보면 40몇퍼센트 성장한다고 하고 미국의 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모으거나 부인 반지까지 팔아서 개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실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우리들의 계몽교육을 교수나 언론을 통해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밖에 내부의 기술문제등에도 여러가지 전략이 있겠으나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영환교수 말씀중에 관주도의 경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율로 간다. 그 중에 경제단체도 많이 와서 끼어라. 이 논리에 반대·찬성을 떠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율화·민간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관에서는 환경조성이나 그밖에 해야 할 것을 민간주도시대나 민간이 해라, 민간에서는 골치 아프고 공익보호차원에 있는 것을民間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미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S/W와 관련된 기업을 하려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용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용자제도가 현재 H/W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S/W사업을 하는 사람은 연필과 책상, 컴퓨터만 있어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행도 자율책임경영이 있으므로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수도 없고, 신용보증기금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S/W산업을 육성하려면 S/W업체에 맞는 용자제도, 다시 말하면 계약서가 담보가 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기본조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부가 물건을 사는데 근거되는 것이 예산회계법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물건을 사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는 최저가 낙찰제 뿐입니다. 이밖에 평균가낙찰제, 종합낙찰제도 있는데 이중에 S/W에 맞는 구매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태킴즈 디펜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쟁용이 이 계획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두 번 스크린을 하는데 첫 번째 스크린은 프로포절 낸 것에 기술력과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들의 기술적 캐퍼빌리티 그리고 경영능력, 이 세 가지를 먼저 평가해서, 즉 예비고사 몇 백 점 이상인가 하는 방식처럼 일정수준이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가격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안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전부 최저낙찰제로 해야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S/W를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가. 또한 DB사업도 대대로 가면 외국 DB사업체에 전부 먹혀 버려 DB에 있어서는 식민지화 돼버릴 수 있읍니다.

이런 등등 정부나 민간이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민간주도란 이름 아래 서로 해야 할 것도 안하는 경우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특히 S/W와 관련해서 불평이 많은데 재무부, EPB가 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체신부·상공부·과기처가 백날 떠들어 봐야 예산회계법 고칠 수 없읍니다. 자율화 경제 환경에서 재무부·EPB가 사각지대가 돼버리면 S/W 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에는 백년하청입니다. 결국 S/W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도기에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많은 모임을 주최해보고 또 그런 모임에도 나가긴 합니다만 별로 열띤 토론이 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가 마치 미래 사회인 양 오인돼 미래를 얘기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임에는 찬·반토론이 상당히 활기 있게 진행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세분 발표자께 간단히 답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김영봉 교수 :** 안교수가 지적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마치지 못한 결론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발표한 것은 그중의 가능한 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와 다른 시나리오가 서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할 수 있다, 적어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싶었읍니다.

과거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있읍니다만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교수가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은 면이 많

았읍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을 일방적으로 수탈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오래 지속시켰읍니다. 지금도 선진국에서 자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니 후진국 보고는 에어로졸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이 이미 에어로졸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되는 과정이 혁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보자원을 쓰는데 있어 기술선택 과정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한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가설이 동전의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가설을 통해 발전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획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서 모든 이념이며 행동을 결정해 주었읍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각 사회주체, 개별주체들은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획일주의적, 관주도적 경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으면서도 컴퓨터 보급 상태나 정보화의 진전이 늦어졌읍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는 민주화 추진과 더불어 적어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체제 일수록 더 많은 정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길조 교수 :** 지식(knowledge)도 정보자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이 도표는 S/W 산업에 일본이 쳐들어오니 야단났다고 해서 미상무성이 만든 자료와 캐나다가 S/W 산업에 있어서 對美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리포트를 인용한 것인데 지식이 들어간다면 전단계 리소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생산재나 중간생산재나 하는 문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다음 잠재적인 전제 조건을 미국이 가장 좋다고 건너 뛴는데 설명하고 싶은 로직은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프로젝트나 5세대 컴퓨터 트론 등을 국가에서 주도해 업계를 지원하고 공동 개발하는 시점에 있읍니다. 일본에는 미국 시장과 다른 세계 시장에서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 경쟁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시스템 쪽에서 패키지화 해야겠다는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본의 70년대 초와 수치상 비슷하게 나와 있고 업계가 그때 수준에 가까운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그쪽으로 가되 빠른 시일 내에 뛰어 넘어 개방 사회에서 살아남고 수출에 중요한 전략상품으로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입니다.

**한영환 교수 :** 안교수가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실패 위험이

정보화사회 시발단계에서 체신부가 옛날 상공부를 모델로 했을 경우 한번 더 있지 않겠나 하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사실 그런 위험은 상당히 있읍니다. 그동안 잠재적으로 정부부처내에서 낙후되고 하위부서로 인식되던 체신부가 이제야 기회가 왔다. 이제야 상공부가 할 때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덤빈다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적인 개혁, 사회적 능률있는 체제로 가는데 체신부가 관련 다른 부서와 산하단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도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체신부가 산하 KTA를 통해 갖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과 급속한 산하단체에 모으고 있는 거대한 쟁크탱크군을 생각해 볼 때 이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화 방향에서 이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R&D이므로 이것이 본질적으로 갖는 분권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은 중화학공업때 자금의 흐름을 다루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공용부문과 사용부문간의 경쟁을 조정해 가는 협조자의 입장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박사장께서 말한 관주도체제의 한계, 민간주도화 등 혁명적인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는 동안에 과도기적 사각지대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발전에 내포되는 혁신의 개념이나 테크놀로지의 개발은 사회제도가 그 개념에 따라가기 위한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컬처럴 타임 갭(Cultural Time Gap)이 없었던 여러 부문 중의 한 부문입니다. 특히 R&D시스템이 다른 것의 핵심역할을 맡는 상황에서 R&D시스템의 마이크로 시스템 컴비네이션, 지식의 생산자인 대학에서 시작하여 최종 유저까지 가는 거대한 마이크로 시스템안에는 과거의 우리 형편으로서는 다뤄보지 못할 정도의 프로페셔널 조직이고도 복잡한 체계로 연결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중재자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것의 법제화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역사의 시점에서나 불가피하게 겪었던 진통이라 여기서 방법이라고는 없읍니다. 그 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그들의 고통을 협회를 통해 결집시켜 정부의 각료 뿐만아니라 언론·학계에 계속 피드인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의 개선과 기술의 변혁이 힘축하고 있는 적응이 따라가게 되는 간격을 최소로 줄여나가는 것외에는 이 진통을 일시에 해결한 나라도, 역사도, 시절도 없었읍니다.

미국에서 60년대 MIS가 처음 도입됐을 때 미국 기업에 이 MIS라는 기술제도가 들어가는데 그 이노베이션 과정이 당면했던 사이콜로지컬(psychological)요소의 실패이유만 분석한 박사 논문이 60년대 10년동안 5천편 가까이 나왔던 것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 방청석에 계신 분중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질문(데이콤 백인섭소장) : 한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주도하의 절대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과 향후 발전방향에서 정부는 되도록 빠지고 민간 주도로 하자는데 찬성입니다. 물론 박사장께서 사각지대를 걱정하셨지만 정상적 성장이 됐을 때는 사각지대도 안 생기고 민간인이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교수께서 서두에 말했듯이 유사이래 한평의 식민지도 한명의 노에도 없이 우리는 역사에 없는 올림픽 신기록 같은 급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장은 비정상적인 균형을 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아이들이 신체적 조건이 상당히 훌륭하나 체능검사를 하면 그전보다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사회의 발전이나 기업이 충분히 컸다고 말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상태라면 제 걱정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옛날식의 상태는 벗어나야 하지만 즉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견해를 묻고 싶옵니다.

한영환교수 :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쪽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외형만 크고 내실이 부족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 제기되는 국가적 과업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이나의 귀속을 따지기 어려운 새 문제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각지대란 어떤 경우에는 놓치면 누구도 하지 못하는 더욱 낙후되는 체제를 가져올 위험이 있지 않으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업은 전체 국가발전이라는 과제에서 경제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 해야되고 복지배분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정부주도·민간주도라는 말을 크게 대립적인 개념으로 하지 않고도 국민경제가 국내산업수준에서 바로 국제경제로 접속되면서 국가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국제경제에 임하고 있는 상태를 일본주식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명치유신이래 140년동안 그리고 그수단의 신축성있는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과 정부와 의회의 핵심리더십안에 가치관이 비슷하고, 비교적 사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계층이 공유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조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치유신을 했을 때 그 이전 약6~7백년동안 진행됐던 번들의 역사적 흐름에서 사무라이계층의 가치

관은 국가인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즉 멸사봉공의 사무라이가 명치 유신 이후 역할이 분리돼 일부는 고급관료가 되고, 일부는 고급경영자, 그리고 일부는 당과 의회의 간부가 되는데 이 삼자간에 가치관의 체계와 출신배경과 그 유래가 일본주식회사를 멸사봉공의 국익을 위해 융합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중 하나는 그런 역사가 없고 정부관리, 기업가, 당의 핵심간부사이에 가치에 있어서 국익을 향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원과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할만한 신뢰가 끊어진 채 지내왔다는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력을 가지고 생산요소들의 증가, 배분, 변질,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단계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용했는데 앞으로 정보의 합리성이 상대방의 설득과 순종을 가져오는 새로운 컴퓨터언스와 파우어가 생기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을 때는 그런 관주도적인 체제는 기업도 따라오지 않고 통합도 안되고 불신만을 키워 버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일단 기업쪽으로 권한과 조정권을 넘겨줘 이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때는 공직자들이 그들의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코드 메시지. 베에날 코드에 붙으면서 폴리시 인스트루먼트를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업은 다시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절대로 선의의 지혜를 내주는 데가 아닙니다. 울고 싸워서 뺏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로 권력을 내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강조되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과의 대결에서 제3자에 있는 학계가 기업쪽을 지원하여 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Justification*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누구도 자기를 안 따라 온다는 것을 관리 스스로가 알고 *justifiable*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할테니까 지금보다 다른 기획의 과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각지대와 같은 그런 코스트는 지금쯤 그 가격을 지불해야 사회적으로 마인드화된 효과적인 시스템운영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쪽을 일단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사회: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사회자로서 느낀 몇 가지 점을 간단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야말로 한국에 있어서 사회과학자들이 정보화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이제껏 과학자들이 주도해온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에게만 맡기기에는 정보화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사회를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귀속시키는 이런 중대한 정보화문제에 대해 과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정보부문이 뭔지 아직 사회 과학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비재나 자본재나, 또 정보부문이란 것이 2차산업과 3차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2차산업에서는 정보산업을 정의한다면 3차부문에서는 정보산업을 이용함으로써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의 도입이 얼마 만큼 생산성증대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 계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KISDI 모델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느낀 것은 정보화의 진전이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한 국사회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느낀 것은 우리가 정보화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면 정보화사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의 전망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보화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대조적인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경제에 큰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2차부문의 공동화 현상-제조업부문의 공동화 현상이 가장 큰 경제 병폐라고 봅니다. 일본은 2차산업에 있어서도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계속 경쟁력을 갖고 있고, 생산성 증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정보화사회에 대한 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화사회를 인간이 조절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세분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